

2010/9/15 일본연구소 연구집담회 기록

일본의 ‘국민의 축일’: 기억의 역사화와 탈역사화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자: 한영혜 국제대학원 교수
- 장소 및 일시: 2010년 9월 15일 국제대학원 신관 101호

● 내용기록

아직 완성된 원고는 아닙니다. 제목도 조금 더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조그만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제제기부터 말씀드리면 기념일이라던지 국민축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민속의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다가 몇 가지 소박한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 때 가졌던 소박한 의문들은 절기까지 국민 축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천황과 축일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이쇼 천황은 없나?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 것이 토대가 돼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민축일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경일, 기념일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축일을 따로 법률을 정해 휴일을 정하는 시스템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축일로 재편되었는데 전후 공적 축제일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휴일을 규정한 법률은 나누어드린 발표문에 있습니다.

GHQ의 인권지령과 신도지령에 의한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화적 요소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일본사회 내부에서 신헌법이 상징하는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배경입니다.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축일법)이 갖는 역사적, 사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축일이 신헌법 정신에 기초함을 표방하고 있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새로운 법률에 9개의 국민축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짜와 거기에 부여된 의미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문화의 날, 근로감사의 날 등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 국민입법으로 7개월간 수십 차례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명분과 어떤 제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것이 축일로 제정되는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 심의된 의사록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록을 보니까 9개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고, 9개 제정된 것들 중에서 6개가 전전의 것이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고, 뜨거운 논란이 되다 메이데이, 부인의 날들은 배제된 경우도 있고, 국시의 날과 평화의 날들은 보류되었습니다. 날짜하고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날짜를 정하면서 서로 맞물며 있다는 점 역시 의사록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의사록에서 어떻게 명분을 정하고 날짜를 정했는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입법을 표방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범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날’을 참의원은 주장, ‘국민의 축일’을 중의원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중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 날을 주장한 이들의 이유는 축일은 대중이 알기 쉽지만 과거의 축제 일과 관련하여 생각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헌법의 이념에도 더 합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일은 추모라던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는 과거의 연속성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실제례와 같은 신화적 성격을 배제하고 축일은 국민중심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의원의 안이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은 휴일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날은 단

순히 쉬는 날이 아니기에 행사가 있어야 쉬는 날과 구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9개의 국민의 축일이 제정됩니다. 9개의 축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발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1948년 7월 4일 중의원, 5일 참의원에서 법률안이 체결됩니다. 성인의 날, 헌법기념일, 어린이날, 문화의 날과 근로감사의 날을 새로운 시대를 표상하는 축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시의 날이나 평화의 날은 결정 후 보류가 되어 나중에 채택되기로 합니다. 국시의 날은 1966년 건국기념의 날로 부활이 되고, 평화의 날은 재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 제시된 축일들의 제정과정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기념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어린이날, 문화의 날, 메이데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절, 즉 국가의 창설을 기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치절을 존속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11월 3일 날짜만 남겨놓고 다른 날로 정하기로 합니다. 명치절이라는 명칭이 너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고 건국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11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할 것이 주장됩니다. 그러나 중의원은 5월 3일 안을 주장하여 중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메이데이를, 어린이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많은 논의 끝에 메이데이를 빼고 헌법기념일이 5월 3일,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정해지고 11월 3일은 문화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의 날에 대한 애매성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증진시키는 날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문화의 날에 대한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근로감사의 날은 9개의 축일 중 유일하게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투표로 정한 날입니다. 이는 메이데이가 배제된 것과 관련됩니다. 메이데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날만이 아니라, 다양한 축제의 날이라는 것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축일로 적당하지 않아 뺏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의 의미를 갖는 축일을 11월 23일로 가지고 갑니다. 원래 11월 23일은 천황이 밥을 먹고 재례를 행하는 날인데 이 날이 근로감사의 날로 낙착이 됩니다. 근로감사의 날이라는 명칭 역시 계급의식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메이데이와 부인의 날은 지지도 높고, 관계 단체의 청원도 강력했습니다만 논란 끝에 국민의 축일로는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배제의 논리는 ‘국민 전체’가 아닌 ‘부분’의 축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이라는 다른 맥락의 국민 담론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급이나 젠더와 관련된 축일 지정 요청에 대해서 이런 논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교묘히 논리의 축으로 이용해서 국민 안에 있는 부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주체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이 등장하는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워 평화, 평등, 인권이라던지를 부정하는 논리로 전도됩니다. 국민입법에 의한 국민의 축일은 오히려 탈역사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자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질문

박정진 선생님: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담론 분석을 했는데, 중참의원간의 의견대립이 많았는데, 중의원과 참의원의 대결구도가 왜 생겼는지? 이런 문제를 봐야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축제에 대한 논의들을 관통하는 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참의원 대립같은 문제에 대한 주변지식이 더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만의 특수성, 한계성들을 이해

하기 위한 맥락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영혜 선생님: 축제일과 관련된 날짜와 명칭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의사록을 들여다 보게 되었던 점이고, 이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록뿐만이 아니라 청원의 문제도 봐야 할 듯 합니다. 저도 지적하신 참의원, 중의원 대립구도가 신기했습니다. 아직 정치적인 성격을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여쭙어 보고 싶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의 역할이 이 당시 다른 기능을 했는지 제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대립축을 설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날의 문제에 따라서 다른 컨텍스트 속에서의 논의들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중참의원의 구성이랄지, 정치적 분포라던지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이 있으신지요?

조관자 선생님: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의 시기가 달라서 공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논쟁의 축속에 신도 세력이 있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수 세력들은 천황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을텐데요. 그런데 축일 제정과정에서 기억의 탈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전후 민주주의가 국민을 어떻게 재편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와 역사와 탈역사라는 문제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한영혜 선생님: 축일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천황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살아왔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었습니다. 축일이라는 자장 속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천황제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지는 말자고 안 넣습니다. 춘분, 추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명칭은 둘째 문제이고 넣으려는 날짜가 먼저였다는 생각입니다. 추분이 선조, 망자에의 추모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천황제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일부러 피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을 남겨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역사화와 관련해서 밖으로는 표출되지는 않지만 저변에 깔려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진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축일 제정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 절충에 가깝습니다. 이는 GHQ와 일본 보수 정치간에 의식과 수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GHQ의 입장이 어땠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분단정권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냉전의 시기로 변해가는 때 당시 보혁구도와 맞물려 생산된 절충과정이라면, GHQ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한영혜 선생님: 국시의 날을 못 채택한 것은 GHQ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GHQ는 기혼절이 중심 타겟이었던 같습니다. 축제일 갖고 이런저런 간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어쩌면 GHQ의 전략 속에서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경분 선생님: 일본의 축일에도 국가 행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영혜 선생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를 배제한 것입니다. 행사는 민간에 맡겨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분 선생님: 축일이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김효진 선생님: 지방자치제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요? 성인의 날 같은 경우

한영혜 선생님: 성인의 날은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의 경우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문화의 날도 그렇지요. 마이너리티들의 문화제를 문화의 날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아이라니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성금을 주거나 편드를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야 할 듯 합니다.

남기정 선생님: 중참의원 문제는 신헌법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진 때이니까 구성이 아마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 이렇게 되었는데 사회당이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던 때일 듯 합니다. 참의원은 직능대표제이니까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참의원의 존재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도 중의원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기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고정하고 이어가려는 역사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는 탈역사화, 탈맥락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시기 탈역사화, 탈맥락화라는 것의 역사성이 사상되어 가는 겁니다. 날짜는 있는데 내용은 없는, 탈역사화된 국민이 되어 초역사적 국민이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트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영혜 선생님: 중참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중참의원 내에 문화위원의 구성 역시 중요할 듯 합니다. 일본이 평화롭고, 민주주의화 되었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역사의 기억을 기념일 속에 넣어서 그 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프로세스로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일본은 그런 메커니즘 없는 정태적인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쇼 민주주의, 전후 민주주의 외에 일본의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말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인식의 문제라고 할 때 과거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역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관자 선생님: 제목을 바꾸신다면 기억의 역사와 탈역사를 한꺼번에 놓는 것보다 뭐가 역사화되고 뭐가 탈역사화되는지 구분해서 쓰면 좋을 듯 합니다.

이은경 선생님: 당시 일반 지식인 사회나 다른 사회의 분위기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을까, 선포되었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6일 정도 더 늘어났는데 그 과정은 어땠을지, 한국과 비교라든지 하는 연구주제들도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